

세월호 7주기 선상 추모식 앞두고 코로나에 합정 승선 인원 제한

“아들딸 낫 달래야 하는데...” 애타는 유족들

합정필수요원 제외하면 51석 뿐
해상경계 위해 2정 투입 불가는
모든 유가족 참여하기 어려울 듯
“그리운 우리 애 올엔 못 보나” 한숨

“올해는 유가족들 모두가 잠시 해역을 둘러볼 수 없어요. 봄이 오면 많이 보고 싶는데...”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간다며 나간 아이들이 깊은 바다 속에 갇혀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7년이 됐다. 매년 이맘때 아이들을 데려간 아수한 바다를 찾아 “미안하다”, “보고싶다”며 인사도 없이 떠나간 가족들을 목놓아 부르는 것도 올해는 어렵게 됐다.

해경이 유가족들에게 합정 한 대만 지원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승선 인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세월호조사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내놓은 수사 결과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난데다, 선상 추모제 참석도 어렵게 되면서 가족들은 아수하고 서운하기만 하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속울음만 내고 있다.

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오는 11일과 16일 진도 맹골수도에서 열릴 예정인 세월호 선상 추모 행사에 동승할 승선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4·16재단측에 전달했다.

해경은 애초 세월호 유가족과 4·16재단 관계자들을 태우고 목포시항을 출발,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군 맹골수도를 찾아 선상추모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해경은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 승선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 방위 때문에 하루에 3000 t급 함정 1척만 지원할 수 있는데 코로나 여파로 합정 필수요원 48명을 제외하면 51명만 탑승할 수 있다는 게 해경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크지 않아 합정



세월호 참사 6주기였던 지난해 4월 16일, 진도군 맹골수도 참사 해역을 찾은 유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 130여명의 유가족들이 선상추모에 참여했다.

유가족들은 아쉽고 서운함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한 채 공명없고 있다.

4·16재단 관계자는 “승선 가능한 인원이 51명에 불과해 유가족 내부에서도 누가 참여해야 할 지 고민이 깊다”며 “유가족들 간 서로 배려하고 고민해 최종 참석자를 결정했지만 1년에 한 번 가족을 보러 가는 것조차 못한다니 심정이 오죽 하겠냐”고 말했다.

일부 유가족들은 인사도 없이 떠난 가족들을 보

고 싶은 심정을 숨기고 행사 진행을 도와줄 4·16재단 관계자들 등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많은 유가족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승선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7년이 지났어도 슬픔은 그대로인데다, 인사도 없이 떠나간 아이들, 배 안에 타고 있던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많은 승객을 죽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놓고 인사도 없이 떠난 가족들을 보러 1년에 한번 가는 것조차 지원해줄 수 없는 해경 방침이 야속한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경이 배 한 척 내줄 수 없을 정도로 합정이 부족하다는 서운함도 감지된다.

서해해경청은 “목포해경이 보유한 3000 t급 함정 2정이 번갈아가며 해상 경계작전에 투입돼 2대 모두 추모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허위 진료기록부로 보험금 챙긴 한방병원 의사 2명 벌금형 감형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가로챈 한방병원 한 의사와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 판사 김재근)는 사기,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례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의사 A(54)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한의사 B(51)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여명의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51명의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편취토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B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요양료급여비를 챙기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무겁다”면서도 “사기 범행 등으로 받아 챙긴 금액을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공탁한 점,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데 따른 피해금액도 일부 대위 변제하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네살배기 아들 폭행한 엄마 조사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여·25)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네 살배기 아들 B군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긴급 분리 조치하는 한편, 친모 A씨가 장어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치료 등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른 남자와 술 마신다며 여친 폭행

여친친구가 다른 남성과 술자리를 갖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7일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고 오해해 여친친구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4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여친친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말리던 다른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알코올의존증 증세가 있는 A씨는 B씨의 이성친구 관계를 문제 삼으며 수차례 폭력을 행사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파트 입주 예정일 훌쩍 지났는데...이사 못한 시민들 줄소송

추가 분담금 놓고 갈등 계속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원들

쌍용건설 상대 가처분 신청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훌쩍 지나도록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도 가처분 결정을 한 달 넘게 하지 못하면서 입주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던 조합원들의

경우 기존 집 계약을 연장해야 할 지 고민이 깊어지는 하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우산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3차례에 걸쳐 쌍용건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입주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5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 18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23명(3월 24일), 19명(3월 31일) 등이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우산지역주택조합원 158명은 지난달 3일

‘입주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처음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764세대 중 조합원들 몫인 565세대 중 절반이 넘는 410여세대가 입주 기한(2021년 2월 28일까지)이 지나도록 거처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입주(2020년 12월 31일)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73억 6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건설 공사에도 96억 3400만원이 더 투입된 점을 들어 342억 9800만원을 조합측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각 세대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평균 6400여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거부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갑작스럽게 제시한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며 30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건설사 측은 추가 비용을 받기 전에는 입주할 수 없다며 막아서면서 입주 거부 사태가 빚어졌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입주하지 못한 조합원들 수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